

'성완중 리스트'와 당사자들 해명							
							
메모 금액 미화 10만 달러	7억	3억	2억	1억	2억	미표기	미표기
메모 수회일자 2006.9.26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표기	미표기
녹취록(경향신문) 있음(2006년~2007년)	있음(2006년~2007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해명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다. 당시 9월23일 독일로 출국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함부로 받은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민권적도 없다."	"성 전 회장을 잘 알지도 못한다."	"말도 안되고 당혹스럽다."	"도용 요청 거절해서 섭섭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별다른 인연 없다."	

추가폭로 터지나...정국 거센 소용돌이

블름 어디로...정치권 초긴장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완중 리스트로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졌다. 검찰 수사 결과 성완중 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돈 거래만큼은 꼼꼼히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제3의 인물에 의한 추가 폭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의 긴장감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일단 검찰이 지난 10일 확보한 성 전 회장의 유류 품에서 허태열·김기춘·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원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거물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이나 사면 받았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도 공을 들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수성기행 기업인인 그는 1980년대부터 기업 활

성완중, 여야·지역 초월 마당발

메모 거론 당사자들 모두 부인 보선, 총·대선까지 메가톤 파장

동과 정치 활동을 병행하며 충청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왔고, 재경 '충청포럼'을 운영하면서 충청 출신 정·관·재계 인사들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했던 옛 자유민주연합에서 당시 김종필 총재의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고, 원내 입성도 자민련의 후신인 선진통일당 당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인이 그렇듯 성 전 회장이 충청권 정치인들과만 친분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공통된 전언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고, 여당 내에서도 양대 계파인 친박계와 친이(친이명박)계를 구분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이후에는 주류인 친박계와 접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06년과 2007년은 박 대통령

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권 후보를 놓고 경쟁할 때여서 오래전부터 성 전 회장이 친이계보다는 친박계 쪽에 가까웠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기 실장은 물론 이원구 총리, 김무성 대표 역시 최근 성 전 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로로 구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시 박근혜 경선후보를 돕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이계와 친박계는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가 터져 나오자 약속이나 한 듯 '자파'와는 관계 없는 인사임을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이 긴급 회견을 자청해 거듭 결백함을 주장한 데 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배경에는 주류 친박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성완중 리스트가 추가 폭로될 경우, 정치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성완중 파문이 확산된다면 이번 보선 뿐만 아니라 차기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전반을 뒤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달자·장부 등 추가증거 확보가 관건

메모·녹취록 증거능력 있다

성완중(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관련자 혐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의 범행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나 육성 인터뷰 녹취록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증거로 채택될지는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그 신빙성을 인

정하느냐에 달렸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메모 외에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돼 단독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녹취록 역시 마찬가지다. 녹취록의 음성이나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이었는지 음성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다만, 음성 파일은 편집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외부 감압이나 헤파에 의해 진술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인터뷰상의 진술 경위와 정황을 따지게 된다.

재정지법의 한 판사는 "전문증거(법정 진술 외의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선불리 판단하기에 이르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선·대선자금 언급...박근혜 정권 직격탄

청와대 당혹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가 지난 2007년과 2012년 대선자금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당혹해 하면서도 말을 아낀 채 사태의 파장과 여론의 향배를 주시했다.

우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허 전 비서실장은 지난 10일자의 이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자칫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돈 문제에 관한 한 부끄러울 게 없다"고 자부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이 날 수 있다.

허 전 실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그런 금품거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캠프) 참여 의원들을 비롯한 캠프요원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면서 어렵게 하루하루 캠프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에도,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아 경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언론보도가 지난 11일 추가로 나오자 청와대는 발각 뒤집어졌다.

전날 공개된 성 전 회장의 주장에는 돈을 건넸다는 시기가 현 정권 창출 시점과는 무관한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였지만 이날 공개된 주

장은 현 정부의 대선자금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다만 홍 의원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실이다"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만큼 일단 청와대는 상황 전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폭로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터라 실제적 진실이 가려지기 힘든 여건에서 의혹만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여론이 악화할 경우 중동 4개국 순방에 이은 내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사팀장에 광주 출신 문무일 대전지검장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특수통 검사 10명 안팎으로 꾸려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검찰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비롯, '특수통'들로 가득하다.

검찰 내 호남 인맥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문무일(54·사건 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은 광주 일교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검찰에 입문,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수사통으로 이름이 높았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추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살'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다.

또 구분선(47·23기) 대구 서부지검장도 2006년 룬스타의 외환은행 할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대구 출신의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 중 기준 성 전 회장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40611-중-59153호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